

선진국의 포용성장 사례 조사 및 GFC 회의 참석 출장보고서

2019. 11. 11.
글로벌경제실

① 출장 개요

- 과제명: 포용성장에 관한 주요 선진국의 경제사회적 정책 환경과 과제
- 일정: 2019. 10. 6.(일) ~ 10. 12.(토), 출·입국일 포함
- 방문지: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 파리: OECD, 프랑스 전략연구소(French Stratégie)
 - 브뤼셀: 유럽지역위원회(EU CoR), EU집행위원회, 유럽발전기구협의체 (EURADA)
- 출장자: 우천식 글로벌경제실장, 홍민지 연구원, 윤혜민 연구원

② 출장 배경 및 필요성

- 성장 중심의 경제개발로 발생한 소득격차 심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포용적 성장론이 대두
 - 포용 성장은 2009년 세계은행, 2011년 국제통화기금, 2014년 OECD, 2015년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보고서로 출판되었거나 주요 의제로 채택 되는 등 국제무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름.
 - 이러한 국제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와 국가마다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이해 및 정부 정책 방향은 차이를 보이며, 각국의 정책을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사회적 상황과 지역적 맥락에 대한 지식이 요구됨.

- 이와 더불어 주요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거시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포용적 성장 관련 출간물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이에 걸맞은 글로벌 차원의 정책 조사 보고서가 부족
- 따라서 포용적 성장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기관 및 정부를 방문하여 거시적·글로벌 시각에서 각국의 포용적 성장 정책을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 정책을 포지셔닝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줄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

3] 출장 목적

- 본 출장을 통해 포용적 성장 정책 및 연구, 유럽국가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선도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선진국의 포용성장 현황과 정책을 점검하고자 함.
 - OECD에서는 국별 전문가뿐만 아니라 고용 및 복지, 과학·기술혁신, 중소기업 분야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글로벌 동향, 국가별 사례, 정책 이슈를 조사
 - 아울러 OECD 사무총장실의 포용성장 연구팀과 OECD의 포용성장 프레임워크, 국가별 포용적 성장 현황 등에 대해 논의
 - 본 연구에 다수의 유럽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바, 유럽지역위원회와 유럽발전기구협의체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고 선진 사례를 발굴
- 또한, OECD에서 개최하는 Government Foresight Community (GFC)*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사회의 변화, 현안 이슈 및 정책과 관련된 미래연구, 미래연구에 대한 수요 변화 등을 논의
 - * GFC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미래연구 전문가 네트워크로, 정부의 예측 능력 및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와 미래전략을 글로벌 정책 논의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세부 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	비고
10.6 (일)	13:20~18:30	인천 출발 - 파리 도착	기내식 2식 제공
10.7 (월)	09:30~11:00	OECD 조세정책센터 면담	GFC 연례회의 동시 참석(우천식)
	14:00~14:30	OECD 이탈리아 데스크 면담	
	15:00~16:30	OECD 과학기술혁신국 면담	
	17:00~18:00	OECD 호주 데스크 면담	
	18:30~21:00	간담회(1)	
10.8 (화)	10:00~12:00	OECD 포용성장 연구팀 면담	
	14:00~15:00	French Stratégie 면담	
	15:30~17:00	OECD 고용노동사회국 면담	
	17:00~18:00	OECD 창업·중소기업·지역센터 면담	
	19:00~21:00	간담회(2)	
10.9 (수)	10:00~11:30	OECD 네덜란드 및 영국 데스크 면담	
	11:30~12:30	OECD 한국 데스크 면담	
	12:30~14:00	간담회(3)	
	14:00~15:00	OECD 독일 데스크 면담	
	19:25~20:40	이동(파리 → 브뤼셀)	기차 이용
10.10 (목)	09:30~11:30	유럽지역위원회(EU CoR) 면담(1)	
	12:00~14:30	간담회(4)	
	15:30~17:00	EU집행위원회 면담	
10.11 (금)	10:00~12:00	EU CoR 면담(2)	
	13:30~15:00	EURADA 면담	
	18:20~	브뤼셀 출발 (홍민지, 윤혜민)	
10.12 (토)	11:25~23:50	브뤼셀 출발 - 리야드 도착 (우천식)	기내식 2식 제공
	~14:55	인천 도착 (홍민지, 윤혜민)	

* 숙박: ①파리: Auteuil Tour Eiffel Hotel(3박, 조식 불포함),
②브뤼셀: Hotel du Congres(2-3박, 조식 포함)

** 우천식 실장은 본 출장 직후 T20 사우디 준비워크숍 참석으로 귀국 항공편 상이

4] 주요 내용

가. Global Foresight Community 연례회의

- 본 회의는 미래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국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
 - 세계 각국은 오래 전부터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핀란드의 사례가 두드러지는데, 핀란드는 체계화된 국가미래전략 형성의 대표적 모델
 - 종합적인 국가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 수립의 의무화: 새 정부 출범 시 집권기 4년 안에 15년 후를 예측하는 미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국회에 '미래상임위원회' 설치
 - 정책 연계성 증진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프로세스 체계화: 총리실을 중심으로 SITRA(핀란드 혁신기금), TEKES(핀란드 기술청), 핀란드아카데미(Academy of Finland) 등이 미래전망 수립에 참여

나. OECD 포용성장 관련 면담

1) 조세정책센터(Centre for Tax Policy)

<면담자>

David Bradbury, Head of Tax Policy and Statistics Division

- 일시: 2019년 10월 7일(월) 09:30
- 조세의 구성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 부동산 보유세(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가 가장 성장친화적이고, 법인세, 개인소득세, 소비세(VAT) 순으로 성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Taxation and Economic Growth, OECD, 2008).
 - 세금의 포용성, 재분배 효과를 논의할 때 조세·이전제도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세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가 더 중요

- 법인세, 개인소득세 인상 등의 왜곡성향이 강한 조세제도를 택하더라도 이를 복지, 교육 분야에 지출한다면 재분배 효과는 더 클 것
- 이와 더불어, 각 국가마다 조세제도 및 구성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별 특성도 고려되어야 함.
 -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인소득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법인세 등으로 조세를 구성하고 있지만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VAT는 없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없음.
 - VAT의 근원지인 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VAT율이 낮고, 이를 인상하는 데 사회적인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또한, 동일한 5%의 세율 인상 상황을 두고,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높은 세율을 채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멕시코, 칠레와 같이 20%대의 낮은 세율의 국가들은 5%의 인상률은 국민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
- 개인소득세는 포용적 성장과 연관이 높고, 특히 자본소득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글로벌화 된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의 수취가 어려운 문제로 지적
 - 2016년부터는 OECD의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협정에 의하여 역외자산 정보가 각 정부에 고지될 수 있도록 함.
- 주로 경제의 자원집약도가 높은 국가들이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기업들이 해외 이전이 어려운 것에 기인(예: 노르웨이, 칠레, 멕시코 등)
 - 법인세는 수익이전(profit shifting)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도입이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법인세는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므로 법인세 인상/하락의 영향은 자본·노동·서비스 및 상품시장 내의 경쟁도(extent of competition)에 좌우됨.
- 한국의 경우 개인소득세, 소비세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법인세와 재산세가 OECD 평균보다 높음.

- 한국은 현재 정부지출을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 개혁과 세수 증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일본: 2000년 25%에서 2016년 30%로 전체 세율 증가
- 조세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이 정부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제도와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

2) OECD 과학기술혁신국(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면담자>

Sébastien Miroudot, Senior Economist, Productivity & Business Dynamics Division
 Chiara Criscuolo, Head of Productivity & Business Dynamics Division
 Nicolas Gonne, Junior Economist, Productivity & Business Dynamics Division
 Heesang Ryu, Junior Economist, Productivity & Business Dynamics Division

- 일시: 2019년 10월 7일(월) 15:00
- 과학기술혁신국(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은 경제와 사회에 과학기술 및 혁신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집필하며, 과학기술 및 혁신 전망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책 목적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 포용성장과 관련해서 특히 여성 및 청년층에 대한 포용적 일자리 창출에 스타트업의 역할 구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스타트업 수를 늘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함.
 - 다수의 OECD 국가는 최근 몇 년 간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고, 산업 및 기업 간 생산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생산성 둔화는 글로벌 프론티어와 후발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확대로 보이며,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낮은 생산성은 서비스 산업에서도 주요 도전과제로 남아 있음. 기술 변화에 따라 제조업도 솔루션 및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 제공도 동반하고 있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명확한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

고 있음.

- 포용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은 OECD의 『Going Digital: Shaping Policies and Improving Lives』에 주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사회가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질문을 일부 다루고 있음.
 -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 구축, 사회적 번영과 포용성, 디지털 시대의 신뢰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
 -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토대가 되는 만큼 국가 및 개인의 정보 보안을 고려한 메커니즘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중요함.
 -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디지털 보안 및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도록 장려해야 할 필요
 -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톨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구축이 요구됨.
 - 디지털 기술 변화로 인해 OECD 국가 일자리 중 14%가 자동화 위기에 놓여 있으며, 향후 20년 안에 약 32%의 일자리가 기술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반면 지난 10년 간 약 40%의 신규 일자리가 디지털 집약적 산업에서 창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직무의 유연성, 이동성, 안전성의 균형을 유지하며 새로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함.

3) OECD 포용성장 연구팀

<면담자>

Romina Boarini, Senior Advisor, Inclusive Growth Initiative Coordinator

Žiga Zarnic, OECD Inclusive Growth Advisor

Liva Stokenberga, OECD Inclusive Growth Analyst

- OECD의 포용성장팀은 사무총장실 직속으로 OECD의 다른 국,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진행
 - 아동, 젠더 이슈와 포용성장을 연계

- 정치경제, 제도개혁에 포용성을 고려
- 환경과 포용성장(녹색성장)
- 올해 KDI-OECD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의 후속연구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
 - 개혁실현(Making Reform Happen)과 관련하여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각 국가마다 정부의 역할과 재분배에 대한 문화/선호도가 다른 것을 고려, 정책의 수요 및 반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KDI 황수경 박사가 재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참고
 - 한국에서 대기오염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 OECD의 포용성장 대시보드를 한국 상황에 맞춘 추가 연구

4) OECD 고용노동사회국(Directorate for Employment, Skills, Social Affairs)

<면담자>

Mark Keese, Head of the Skills and Employability Division
 Thomas Liebig, Principal Administrator, International Migration Division
 Veerle Miranda, Senior Economist, Social Policy Division
 Chris Clarke, Junior Economist, Social Policy Division

- 프랑스는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꼽히는 국가이지만 여전히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민자 정착 지원도 제한적인 상황임.
 - 프랑스는 이민자에게 정착 시 첫 3년간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기간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다수 존재
 - 이민자는 대체로 낮은 교육 수준 및 저숙련 일자리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보다 포용적 이민정책은 직업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직업 및 직군 간 격차 해소를 꼽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가 있으며, 산업구조 및 정책 환경은 아래와 같음.
 - 독일은 강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숙련 노동의 자동화로 인

해 직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 발생

- 북유럽은 '70-'80년대에 산업 구조조정에 개방적 정책으로 인력 재교육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 것이 향후 고생산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한국 노동시장은 대기업-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높은 격차로 인해 노동이동이 경직되어 있으며 지난 몇 년간 높은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높은 근무환경 격차로 인해 청년인력이 대기업 채용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현황으로 경쟁 악화 및 높은 청년 실업률 초래
-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격차 문제 및 교육-노동시장 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시적인 조건적 혜택 제공의 정책이 아닌 노동시장, 주택 환경, 교육비용 등 포괄적인 삶의 영역을 고려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함.

- 정책 학계에서는 아동 수당과 같은 세부적인 정책에서 노동, 주거, 교육, 삶의 질 등 다양한 영역을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음.
- 출산 장려 정책은 사회가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 수준 등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각 나라 별로 다른 정책이 요구됨.
 - OECD 평균 대비 한국은 한 아이 당 높은 교육비용 부담이 출산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 출산 후 경력 단절 여성이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어려운 상황, 비정규직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 부재 등 저출산 요인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 여성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는 상황. 출산 장려 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고려 필요

- 노동자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 관행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위계질서가 엄격한 기업 문화일 경우 불필요한 추가 근무가 강요되지 않도록 기업 문화 개선 필요
 - 노동시간 감축만으로 생산성이 자동적으로 증가하지 않기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적의 근무 환경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5) 창업 · 중소기업 · 지역센터(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면담자>

Jonathan Potter, Head of Entrepreneurship Policy and Analysis Unit

- 일시: 2019년 10월 8일(화) 17:00
- 중소기업, 창업과 포용적 성장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Outlook』, 『Missing Entrepreneurship』(격년 주기로 발간) 추천
 - OECD 회원국 별로 중소기업 현황, 정책 및 평가가 마련되어 있음.
 - 청년, 여성, 이민자, 고령노동자 등의 취약계층은 창업 ·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기술(skills), 네트워크 등이 부족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
 - 또한, 단순 스타트업/창업 비율보다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스타트업 (innovative start-up)들의 성장(scale-up)이 중요한데, 3년 이상 생존하는 스타트업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자영업자의 증가가 대량의 기업구조조정의 결과라는 연구를 참고, 자영업이 양질의 일자리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성장은 국가마다 다른 중요도를 가지는데, 독일 과 이탈리아와 같이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은 혁신 스타트업 발굴에는 주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프랑스는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어 스타트업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창업자금 부족은 모든 OECD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미국 제외)로, 유럽은 스타트업을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
 -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미국 자본의 유입으로 자국 스타트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을 우려
 - OECD는 매해 『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를 발간하여 각 국가의 기업 자금접근성, 대체금융, 채권금융에 관한 정책과 데이터를 공개
 - 아울러, 많은 스타트업들은 적합한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는 연구기관·학계와 기업의 연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
 - * 특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교수들이 스타트업과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
 - * 영국이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업에는 강점이 있음.
 - 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분야에 대한 교육을 독려하면 지식집약산업이 성장하고 인력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생각
 -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는 개인의 경영·리더십 스킬을 강조하여 이를 습득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 여성 기업가가 남성 기업가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고 남성 기업가들이 평균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통계상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자금접근성, 경력 등)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님. 오히려 사회·문화적인 편견이 여성들이 창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됨.
-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으며(28%), 최근 네덜란드와 영국도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긴축정책이 장기간 이어진 영향이 있으며, 최근 각 이코노미(gig economy)와 IT 플랫폼사업의 확산으로 부업 형태의 자영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해답이며, 이는 오히려 대기업의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성장가능성이 많고 혁신적인 분야의 창업 교육과 지원은 바람직
- 독일의 중소기업은 역사적으로 사회경제가 발달하여 성장한 것이며, 다른 국가에 적용 가능한 사항은 아닐 수 있음.
 - 이중직업교육제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은 다른 국가들에서 참고할만함.
-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OECD의 『Regional Outlook』 참고
 - 중앙-지역정부간 협의 및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국가별 상황에 따라 중앙집권적인 형태 또는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도 있음.
 -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체계, 광대역 통신망을 통한 지역 연결이 중요

다. OECD 국가별 담당자 면담

1) 이탈리아

<면담자>

Mauro Pisu, Head of Greece/Italy Desk

Tim Bulman, Economist, Greece/Italy Desk

- 일시: 2019년 10월 7일(월) 14:00
- 이탈리아 정부는 불평등, 빈곤을 대처할 행정 능력이 부족하나, 최근 새로운 정책적인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음.
 - Citizens Income(2019): 실업자 및 빈곤층에게 최대 780유로/월 제공, 수혜자는 각종 고용 및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하지만 이탈리아의 고용 훈련·교육 서비스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 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을 활용하고, 유럽의 지역정책을 따름. 다만, ERDF도 단순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지는 않음.

- 이탈리아는 역사적으로 남북간 발전 불균형이 이어져 왔고, 특히 낙후 지역(남부)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것이 큰 문제
 - 이를 해결하기 위해 OECD는 현재 세법상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 부소득자(second earner)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Economic Survey 2019』 참고)

□ 지난 정부가 실시한 「Jobs Act」는 해고 절차 간소화, 한시적 사회보장기여금 면제를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였으나,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사회보장기여금 면제 기간 동안만 채용)

- 이후, 「Dignity Decree」(2018)를 시행하여 계약직의 계약기간과 계약연장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행정적 비용을 인상하였으나, 정규직 채용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은 아님.

- 당초 본 정책에 대한 OECD의 평가는 부정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정책 도입 후 고용 성장세가 유지되었고 특히 정규직이 증가하였음.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데이터 수집 시기가) 고용률이 감소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성장이 유지되고 정규직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아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엔 이름.

- 「Jobs Act」의 여파로 비정규직이 급증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규직 전환 및 채용 많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음.

- 또한, 높은 (청년) 실업률의 원인으로는 낮은 공교육의 수준 및 고등교육 진학률(교육 관련 내용은 『Economic Survey 2017』 참고), 높은 인건비, 노동법 상 채용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있음.

- 인건비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다음으로 높지만, 생산성은 주요 유럽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

- * 높은 인건비 탓에 낙후지역은 비공식 노동시장·채용이 활성화

- 이러한 노동시장의 상황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억제하고 인재 유출을 독려하여 악순환이 반복

- 이탈리아 노동시장에 대한 OECD의 권고는 아래와 같음.

- 1) 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축소
 - 2) 해고 및 퇴직금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현재는 근속연수 외에도 부양가족, 근로자의 행태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침.)
- 이탈리아는 인구변화(고령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노동인구 확보도 시급
- 낮은 출산율은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적고 영유아 보육비가 비싼 것에 기인(*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용이하고 그 기회가 많을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유아수당(Baby Bonus)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음.
 - 근본적으로는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낙후지역 및 여성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보육서비스 보급을 확대해야 할 것
 - 이민자의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고 최근 몇 년은 비슷한 수로 유지
 - 가장 큰 이슈는 이민자의 교육(직업훈련) 문제이며, 특히 언어교육 등의 성인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이민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직업) 스킬을 인정해줄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
-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만큼 이탈리아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2000년대 초중반에는 그 수가 늘어났지만(2007년 약 670만 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여 현재는 600만 명 정도
- 자영업자들이 탈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비율을 줄이고자 함.
 -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발달하였으며, 이는 자생적으로 출현하였으며, 과거 길드의 유산일 수도 있음.
 - 다만, 이러한 조합들은 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정부에서는 시장을 개방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음.
- 정부지출은 연금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GDP의 약 18%), 그 외 분야는 GDP의 30% 정도
- 임시 연금개혁이 마련되었으나, 2022년 대선이 있어 유지될지는 미지수
 - 최근 조달 분야에서는 경쟁 도입 및 IT 활용을 통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교육 및 의료, 정보기술에 대한 지출은 늘릴 필요가 있음

□ EU멤버십에 대해서 이탈리아는 긍정적인 편

- 금융위기 이전에는 회원국 중 EU에 대한 지지층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였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민의 60-70%는 EU 회원국으로 남는 것을 지지

2) 호주

<면담자>

Ben Westmore, Head of Australia/Ireland Desk

Philip Hemmings, Senior Economist, Country Studies 2

□ 일시: 2019년 10월 7일(월) 17:00

□ 호주의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의 요인은 대부분 인구 증가(이민자 유입)에 있어 1인당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

- 호주는 한국과 비슷한 '소규모 개방 경제(small open economy)'로 대외경제변화에 민감하며,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중국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함.

- 생산성 증가율도 감소하고 있으나, 타 OECD 회원국 대비 양호한 편

□ 호주는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현재 이민 정책은 포인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언어, 학력, 경력 등으로 포인트를 산정하여 고숙련(high-skilled) 노동자에게 이민을 허가

- 유학생이 많아(교육이 서비스 부문 수출 1위) 이들을 호주에 정착시키는 것도 주요 정책으로, 이는 고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

- 그러나 여전히 이민은 주요 정당간 의견이 양극화되는 이슈 중 하나

- 이민자 통합 절차 및 과정은 타 국가에 비해 수월한 편이며, 이는 역사적인 요인도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난민, 망명 신청자 허가에 대한 규정은 다소 엄격

□ 노동시장은 여성과 고령인구(55세 이상)의 참여율이 높은 것이 특징

- 하지만 여성은 임시직 및 파트타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며, 보육서비스 및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
 - 호주는 민간 보육시설이 대부분이며, 몇 년 전까지는 공급이 부족했으나 현재는 보조금을 통해 보육비용을 낮추고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문제가 다소 해결되었음.
 -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편으로 조기 퇴직을 독려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연금체계 및 퇴직연령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내년 정도).
 - 인구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편이며, 이는 이민자의 증가와 출산율이 안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
- 불평등도는 선진국 평균 정도로 안정되어 있는 편이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큼.
- 불평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 웰빙 등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청년층은 구직에 큰 문제가 없으며 미래와 경제상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이 낮아 이를 인상하는 것과 소득이전을 통한 불평등 완화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
 - 또한, 원주민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도전과제로 남음.

3) 네덜란드, 영국

<면담자>

Annabelle Mourougane, Head of the United Kingdom and Netherlands Desk
Martin Borowiecki, Economist, Country Studies

- 일시: 2019년 10월 9일(수) 10:00
- 네덜란드 경제는 최근 1)연금 제도, 2)노동시장 관련 주요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증가하는 부양비율과 성별 임금 및 연금 격차를 해결하고자 주요 정책대안을 추진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높은 부양비율에 대한 대응으로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고자 54-64세 또는 64세 이상 노인 고용 확대와 퇴직 연령 연장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음.
-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또는 비정형 고용 형태는 주로 여성이 차지하는 등, 남녀 간 임금 및 연금 격차가 높은 편임. 여성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여 남녀 간 임금 및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남성 근로자의 가사 참여 확대를 장려하고자 남성 근로자의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남성 유급 육아휴직은 첫 5일은 임금의 100%, 그 후 5주간은 임금의 70%를 수령하는 제도
 - 여성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감소
- 네덜란드 노동시장에 또 다른 도전요인은 증가하는 자영업 비율을 들 수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자영업과 정규 노동자 간 조세격차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질병 및 장애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되는 반면 부상 또는 질병과 같은 소득 위험 증가에 보다 노출되어 있으므로 직업의 질 또는 고용의 안정성 부문에서 노동시장에 부정적 측면이 있음.
 - * 자영업자-정규 노동자 간의 세금격차 축소가 자영업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네덜란드의 자영업에 대한 조세감소 제도는 혁신적인 창업 및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고자 한 정책이었으나 가짜 자영업* 수가 증가하는 역효과 발생(* 가짜 자영업이란 노동시장에서의 정규 근로자가 세금 감소 등의 혜택을 수혜 받고자 자영업을 병행하여 어떠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가짜 자영업에 대한 규제 및 식별이 필요한 상황)
- 영국은 네덜란드와 달리 지역 간 높은 소득 및 생산성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부진
 - 브렉시트는 지난 40년간 이어온 연합 체제를 최초로 탈퇴하는 것으로, 경제학자도 명확한 미래 상황 및 정책적 대응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

- 브렉시트로 오랜 기간 이어온 영국-유럽연합 기업 간 교류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연합 간의 교역을 대체할 만한 국가의 기업들이 부재할 것으로 보임.
- 영국은 최저임금을 2015년 6.7 파운드에서 2016년 7.2 파운드로 인상
 -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 감소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최하위계층은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자 부담 확대로 오히려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최저임금 인상에는 고용자와 잠재노동자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독일

<면담자>

Andrew Barker, Economist, Country Studies 1

- 일시: 2019년 10월 9일(수) 14:00
- 독일의 생산성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지만 다소 낮은 투자율 및 자본 침체를 보이고 있음. 또한 높은 지역 간 부의 격차와 성별 임금 및 연금 격차가 주요 도전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낮은 투자율 요인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공공투자자의 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되지만 투자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확정하는 등의 비효율적 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독일은 서독과 남독 간의 통일 잔재가 여전히 지역 간 격차로 남아있으며, 임금 격차 보다 부의 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은 상위 10%가 전체 부의 60%를 차지하는 등 높은 부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상당 부분 상속세가 면제가 되는 가족사업 번창에 기인함.
 - 가족사업에 대한 세금 혜택 제도는 높은 성장 시기에는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으나, 생산성 및 성장률이 침체 시기에는 제도의 적

합성 및 변화 필요성 제기

- 독일 노동시장의 주요 도전요인은 높은 성별 간 임금 및 연금 격차와 유럽연합 국가 대비 높은 상대적 비곤율에 있으며, 상대적 빈곤율이란 중앙값 임금의 60% 이하를 받는 인구 비율을 의미함.
- 특히 세대 간 이동성이 낮음에 따라 부의 격차가 굳어져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다 높은 학업 및 직업 성취도에 대한 접근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수준 높은 양질의 직업능력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직업능력교육은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진로 기회를 제공해주며, 희망 시 더 높은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는 발판으로 작용

라. French Stratégie - 프랑스 포용성장 정책 관련 면담

<면담자>

Marie-Cécile MILLIAT, Chargée de mission, General Secretariat

Julien Rousselon, Deputy Director, Society and Social Policies Department

- 일시: 2019년 10월 8일(화) 14:00
- 프랑스 전략연구소(France Stratégie)*는 2013년 4월 설립된 총리실 산하 정책 연구기관
 - * 마셜플랜 집행을 위해 설립된 계획위원회(Plan Commission)를 계승
 - 경제, 노동 및 스킬, 사회정책, 디지털·지속가능발전 4개의 부서로 구성
 - 정책브리프, 보고서, 실행문서 등 연구소의 모든 자료 공개
 -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정부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며, 시나리오와 사실에 기반을 둔 분석은 제공하지만 정책 결정은 하지 않음.
- 프랑스의 이민자 유입은 지난 12년간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프랑스에서 부족한 직업군에 이민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경제

적 효과

- 노동자 부족 현상은 고숙련, 저숙련 직업군 모두 해당되며, 특히 의료, IT, 노인 돌봄, 청소업에 이민자들이 종사
 - * 장기적으로는 교육 및 직업훈련 체계를 개선·강화하여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
 - 실업급여가 높고 기타 사회복지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프랑스인들이 저임금·저숙련 노동에는 종사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을 것
 - 이민자 통합정책에 특별한 점은 없지만,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이민자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체계 구축이 잘 되어 있는 편
 - 이민자에게도 자국민과 비슷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이민자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프랑스 시민이 됨.
 - 프랑스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 중 하나이고,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들도 있어 언어·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용이
 - 다만, 프랑스는 지역사회(주민 공동체)가 취약하여 이민자들이 지역사회 도움 받아 적응하는 사례는 적음.
 -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는 종종 이루어지지만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최근 프랑스는 La French Tech, Station F 등 스타트업과 창업을 독려하는 정책을 대거 시행
- 대부분의 정책은 창업 5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하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기업들의 취약점이 드러나기도 함.
 - AI 전략도 수립하여 네덜란드 정부에게도 조언
 - 초등교육에서 코딩을 가르치려는 계획도 있음.
 - 하지만 노란조끼 시위에서 드러났듯이 일반 시민들은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보다는 전통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선호
- 프랑스의 부채비율은 GDP의 100%에 가까우며, 정부지출을 감축하여 이 수치를 개선시키고자 하였지만 노란조끼 시위의 영향으로 예산계획보다는 10억 유로(GDP의 0.5%) 정도 추가 지출

- 공공부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마이너스 금리의 지속, 낮은 가계부채, 그리고 높은 투자 비율 등
 - 특히 타 유럽국가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투자를 축소하는데, 프랑스 경제는 내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줄이는 것이 더욱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 또한, 최근 실업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보임.

마. EU 기관별 면담

1) 유럽집행위원회

<면담자>

Patrick Klein, Team Leader, Advanced technologies, Clusters, and Social Economy

Maria Baroni, Social Investment Strategy, European Semester Coordination

André Meyer, SME Envoy Network

Grzegorz Drozd, Policy Officer, Innovation Policy and Investment for Growth

- 일시: 2019년 10월 10일(목) 15:30
- 유럽연합의 사회 포용성 정책은 노동시장, 인구구조 등 향후 경제사회적 변화 및 도전요인에 대해 통찰하고 경제사회 구성원에 대해 개인화된 사회서비스 제공 필요성 제기
 - 유럽은 하나의 시장으로서 5억 명의 소비자이자 노동자인 시민들로 구성되며, 다양한 나라의 환경, 노동시장, 산업구조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됨.
 - 유럽에서 사회 혁신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실업, 기술 격차, 기후 변화 등 주요 사회 문제를 기술 혁신 도구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함.
 - 유럽 사회 혁신 대회는 기존 방법 변경 및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내세웠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소비 감소 및 플라스틱 재사용을 장려하고자 함.

- 사회 도전 혁신 플랫폼은 사회혁신가 및 중소기업들 간의 온라인 생태계 설계 및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회에 명확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구현하고 함.
 - 사회 혁신의 잠재력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 활동의 주요 부문으로 자리매김 할 필요성 제기
-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25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며 유럽의 중소기업의 수는 약 23만여 개로 전체 기업의 96~98%를 차지하고 약 100만 명을 고용하고 있음.
- 높은 총 고용 비율 및 대기업 대비 불경기에 대한 비교적 낮은 탄력성으로 중소기업 정책은 고용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 차지
 -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로 독일의 Mittlestands가 자주 언급되는데 독일의 Mittlestand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가족경영 기업을 의미하기도 함. Mittlestands에 해당되는 기업의 특징이 다채로운 만큼 혁신적인 성장을 보이는 기업도 있으나 반대로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기업도 있음.
 - 독일의 Mittlestands 중 4000~5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과잉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어떤 방안으로 보다 혁신적인 성장을 장려할 수 있을지가 관건임.
 - 자영업은 경제에 양날의 검과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기에 매우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 고용 악화 여건에서는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낮은 사회 안전망, 정부재정 악화, 가짜 자영업 식별 어려움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음.

2) 유럽지역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CoR)

<면담자>

Klaus Hullman, Administrator, Conferences-Visitors Service

□ 일시: 2019년 10월 11일(금) 10:00

- EU기관 및 산하기구에는 약 15만 명이 일하고 있으며, EU집행위원회(Commission)에만 약 3만 명이 근무함. 유럽 의회(Parliament)에는 751명의 의원이 있음.
 - 유럽지역위원회(CoR)는 EU회원국의 각 지역 대표(시장 등)로 구성된 EU 자문기구로, 지역과 도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EU 법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또한, CoR은 공통의 이슈를 가진 지역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도 겸함.
 - CoR에는 300여개의 지역이 소속되어 있으며, 각 국가의 회원지역 할당은 인구에 비례하여 부여(예: 독일은 20개 지역, 몰타는 5개)
 - * 회원자격은 5년 동안 유지되지만(연임 가능), 소속국가의 선출직이 유효한 경우에만 가능
 - 일례로 다뉴브 강을 따라 위치한 도시 및 지역들은 교통, 환경, 관광 등과 관련하여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력해 왔음. 이들은 자발적인 지역협력체로 시작하였으나, 향후 EU에서 예산 지원까지 받아 다뉴브 강 유역의 홍수 대처를 위한 공동실행계획을 수립하기도 함.
- 브렉시트로 인해 EU 내 연대, 결속은 오히려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음.
 - 이전에는 EU 탈퇴 등 연합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국가들이 많았으나, 영국이 브렉시트 합의로 인해 겪는 혼란과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EU 탈퇴보다는 EU의 시스템을 개선, 보완하여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회원국이 늘어나고 있음.
 - EU는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상품, 자본, 인력,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영국은 이 중 인력 이동에 반대하여 브렉시트까지 진행되었음.
 - 또한, EU가 분리되면 유럽 지역과 시장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 EU로 인해 시장(경제)과 정치가 이전보다 안정된 상태

3) 유럽 발전기구협의체(EURADA)

<면담자>

Esteban Pelayo, Director, EURADA

Ulises Pisano, Policy Officer, EURADA

- 일시: 2019년 10월 11일(금) 13:30
- EURADA는 유럽 내 지역발전기구의 협의체로 1992년 설립되었으며, 유럽 내 지역발전 및 협력에 대한 지식과 모범사례 공유, 지역발전 전문가들과의 교류, EU 결속기금(Cohesion Fund)과 연계한 혁신 프로젝트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함.
 - 2019년 현재 77개 회원이(23개국) 소속되어 있음.
 -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 설립을 희망할 시 EURADA에서 자문을 제공
- 지역발전기구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사례 및 지식을 공유하며, 기업 혁신을 지원(보조금, 대출, 기술 지원 등)하며, 모든 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행
 - 유럽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을 집행·관리하는 역할도 맡으며, 이 기금을 통해 각 지역의 중소기업, 대학 등을 지원
 - 경제가 다각화되고 발전하며 지역발전기구도 그 형태와 사업 분야가 더욱 다양해짐(클러스터, 기업협의체 등).
 - 투자, 무역, 에너지 등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들도 있음.
- EU의 지역기금(Regional Fund)은 낙후된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되며, 기금은 각 지역의 실정과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최근 EU 차원에서 스마트 특성화 전략(Smart Specialization Strategy)을 수립하여 유럽의 각 지역별로 발달한 산업을 맵핑하고 미래를 위한 주요 우선과제를 선정
 - 지방분권화에 대해서는 특정 모델이나 시스템을 권고할 수는 없음. 다만, 유럽은 다양한 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인 데 비해 독일, 이탈리아 등은 지방이 발달) 그 장·단점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